2022.09.05.

국회예산정책처 I 나보포커스 I 제51호

NABO Focus

「2022~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」에 근거한 재정준칙 도입의 영향 분석

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윤주철 분석관

재정준칙 도입 논의

▪ 재정준칙 도입 논의

- 정부는 「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」(2022.7.7.)를 통해 재정준칙 도입 공식화
  - 재정준칙(fiscal rule)은 수치로 명시하여 법제화한 재정운용 목표
  - 이번 재정준칙(안)은 재정총량 관리지표인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한도를 GDP 대비 3%로 하고, 국가채무 비율이 60%를 초과할 경우 수지 한도 축소

  ※ 기존 「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정부제출, 2020.12.30.)의 재정준칙은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의 곱으로 한도 설정((국가채무 비율/60%)×(통합재정수지 비율/△3%)≤1.0)
- 「2022~2070년 NABO 장기 재정전망」(2022.8. 발간)에 이번 재정준칙(안)을 적용하여 재정준칙 도입에 따른 장기 영향 분석

NABO 장기 재정전망

▪ 재량지출 및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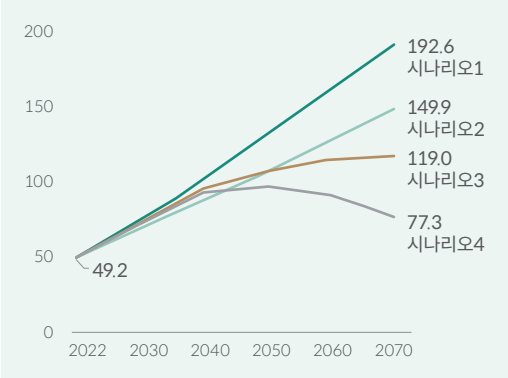
- 재량지출 수준을 조정·통제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시나리오별로 77.3~192.6% 범위로 전망(인구 중위)

재량지출 시나리오

(시나리오1) 장기 수렴 수준 유지(GDP 대비 12.8%, 2012~2022년 평균)
(시나리오2) 장기 수렴 수준 하향 조정(GDP 대비 11.7%, 2012~2019년 평균)
(시나리오3)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증가
(시나리오4) 총지출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로 통제, 총지출에서 의무지출 차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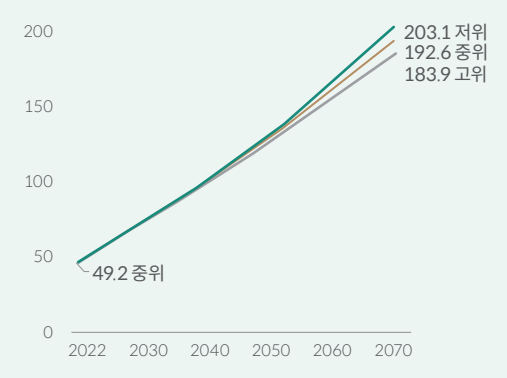
- 인구추계 가정(저위·중위·고위)을 달리할 경우 2070년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183.9~203.1% 범위로 전망(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)

[그림 1] 재량지출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그림 2] 인구추계 시나리오별 국가채무 비율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본 원고는 분석관 개인의 의견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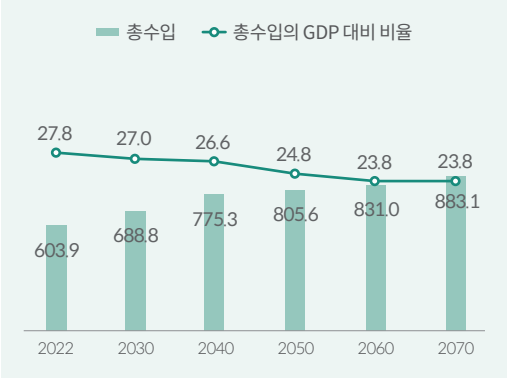
※ 이하의 전망 및 분석 결과는 인구 중위 및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이며, 금액은 GDP디플레이터를 적용한 불변가격(2022년 기준, 조원)으로 제시

▪ 재정총량 전망

- 총수입은 2022년 603.9조원(GDP 대비 27.8%)에서 2070년 883.1조원(GDP 대비 23.8%)으로 연평균 0.8%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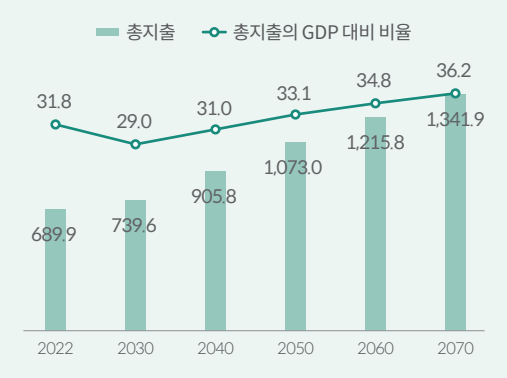
- 총지출은 2022년 689.9조원(GDP 대비 31.8%)에서 2070년 1,341.9조원(GDP 대비 36.2%)으로 연평균 1.4% 증가 전망

[그림 3] **총수입 및 총수입의 GDP 대비 비율**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그림 4] **총지출 및 총지출의 GDP 대비 비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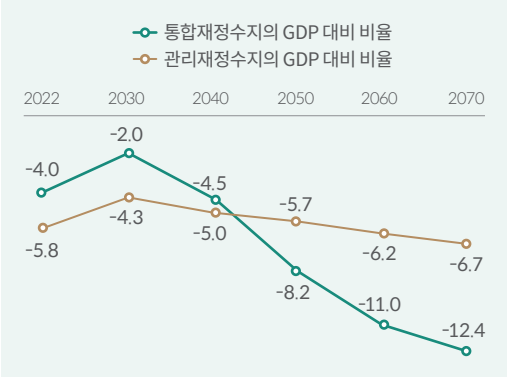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2022년 86.0조원(GDP 대비 4.0%)에서 2070년 458.7조원(GDP 대비 12.4%)으로 증가 전망
  - 사학연금기금과 국민연금기금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 이후 적자폭 확대
  -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는 2022년 127.0조원(GDP 대비 5.8%)에서 2070년 249.6조원(GDP 대비 6.7%)으로 증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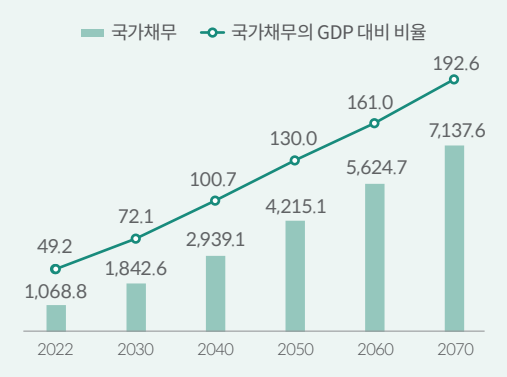
- 국가채무는 2022년 1,068.8조원(GDP 대비 49.2%)에서 2070년 7,137.6조원(GDP 대비 192.6%)으로 연평균 4.0% 증가 전망
  - 현행 세입·세출 구조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수지 적자가 누적되어 국가채무 및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
  - 재정준칙(안)의 기준 국가채무 비율인 60%는 2026년에 초과할 것으로 전망[1)]

[그림 5] **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**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그림 6] **국가채무 및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**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1) 「2021~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」(2021.9.)에 따르면, 2025년 국가채무 비율은 58.8%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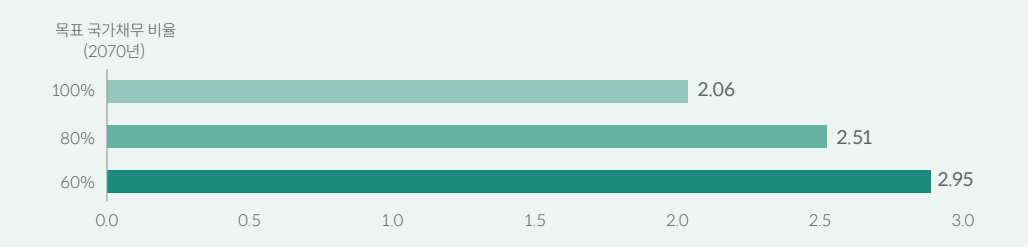
목표 국가채무 비율 달성을 위한 재정수지 개선 정도

▪ 목표 국가채무 비율 설정

- NABO 장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, 재정준칙 상 목표 국가채무 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관리재정수지 개선 정도가 달라짐
  - 목표 국가채무 비율을 100%, 80%, 60%로 가정하고 달성 시점을 NABO 장기 재정전망의 마지막 연도인 2070년으로 하면, 2023년부터 매년 개선하여야 하는 관리재정수지 개선분은 각각 GDP 대비 2.06%p, 2.51%p, 2.95%p로 전망
  - 목표 국가채무 비율과 해당 비율의 달성 시점은 거시경제 및 재정 상황, 사회적 합의 등을 고려하여 설정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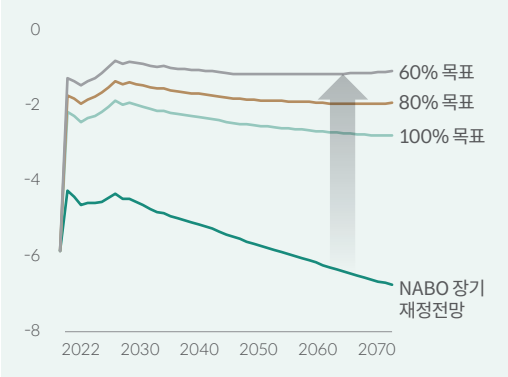
[그림 7] 2070년 목표 국가채무 비율 달성에 필요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개선 비율

(단위: GDP 대비 %p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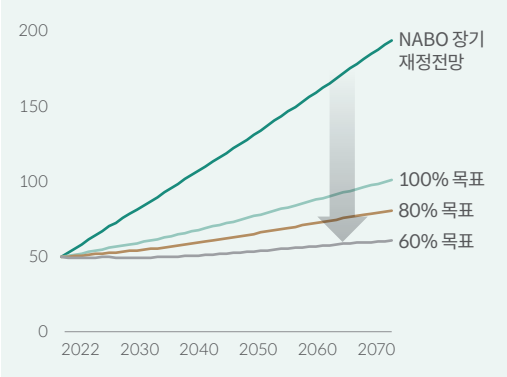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그림 8] 목표 국가채무 비율에 따른 관리재정수지 비율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그림 9] 목표 국가채무 비율에 따른 국가채무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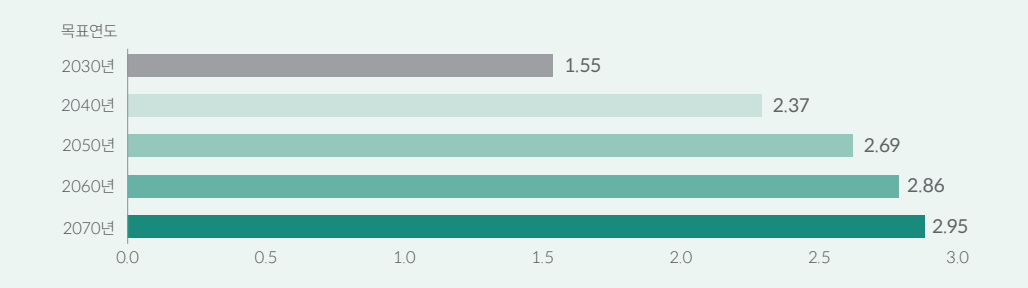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한편 국가채무 비율이 목표 국가채무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인지에 따라 필요한 관리재정수지 개선 정도가 달라짐
  - 국가채무 비율이 목표 국가채무 비율(60% 가정)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길게 유지하려고 하면 관리재정수지 개선 노력은 더욱 요구
  - 예를 들어, 2030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이 목표 국가채무 비율(60% 가정)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23년부터 매년 GDP 대비 1.55%p의 관리재정수지 개선 필요
  - 2040년까지도 국가채무 비율이 60%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려면 2023년부터 매년 GDP 대비 2.37%p의 관리재정수지 개선 필요(2050년 기준으로는 2.69%p, 2060년 기준 2.86%p, 2070년 기준 2.95%p)

[그림 10] 목표연도별 국가채무 비율 60% 유지를 위해 필요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개선 비율

(단위: GDP 대비 %p)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정부의 재정준칙(안) 적용에 따른 재정수지 비율

▪ 정부의 재정준칙(안) 적용(예시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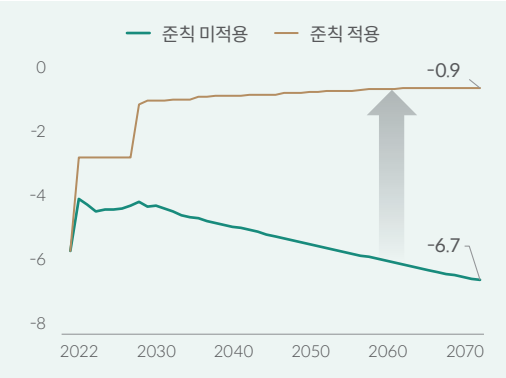
- NABO 장기 재정전망에 이번 재정준칙(안)을 적용한 결과, 장기적으로(2030~2070년)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평균 1% 수준을 유지해야 국가채무 비율 60% 유지 가능
  - 2023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재정준칙(안)의 한도인 GDP 대비 3%를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(2030년에 국가채무 비율 60% 초과 예상)
  - 재정준칙(안)에 따라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이 60%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국가채무 비율이 60%를 넘지 않도록 관리재정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가정
  - 이러한 가정 하에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은 2023~2029년 동안 매년 GDP 대비 3.0%, 2030년 1.4%, 2040년 1.1%, 2050년 1.0%, 2060년 0.9%, 2070년 0.9%로 전망(2030~2070년 평균 1.0%)[2)]

[표 1] 재정준칙 적용 여부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

		2022	2030	2040	2050	2060	2070
관리재정수지 비율	준칙 미적용	-5.8	-4.3	-5.0	-5.7	-6.2	-6.7
	준칙 적용	-5.8	-1.4	-1.1	-1.0	-0.9	-0.9
국가채무 비율	준칙 미적용	49.2	72.1	100.7	130.0	161.0	192.6
	준칙 적용	49.2	60.0	60.0	60.0	60.0	60.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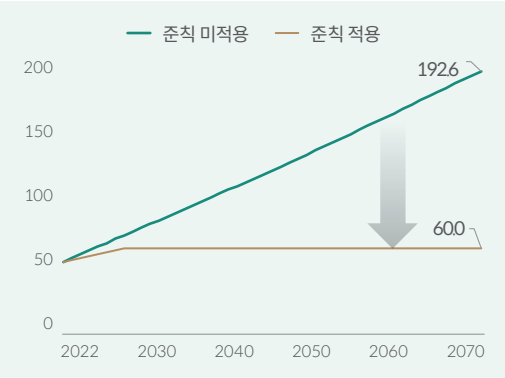
주: 준칙 미적용은 NABO 장기 재정전망의 인구 중위 및 재량지출 시나리오1 기준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그림 11] 관리재정수지의 GDP 대비 비율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[그림 12]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

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다만, 정부의 실제 재정운용은 이와 다를 수 있으며, 전망 초기의 재정운용에 따라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비율 60% 유지를 위한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달라질 수 있음

발간등록번호 | 31-9700484-001731-14 ISSN | 2672-0280
발행처 | 국회예산정책처 발행인 |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담당 |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문의 | 02-6788-4655
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